

치매국가책임제도 도입과 패러다임의 변화



황의동 개발상임이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7년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 10명 중 1명은 치매를 앓고 있으며, 그 수만도 72만 5천명에 달한다. 치매가 노인성질환인 만큼 고령사회로 전환되는 속도에 비추어 볼 때, 치매환자 역시 빠르게 증가('24년 100만명, '50년 270만명 추정) 할 것으로 예측된다.

환자수의 급격한 증가도 문제이지만 치매질환은 그 특성상 장기집중 의료와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요비용 역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15년 기준 연간 106조 5천억원, GDP의 0.9%인 지출규모는 2050년에는 연간 106조 5천억원, GDP의 3.8%로 늘어날 전망이다.

치매환자를 부양하는 가족들은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함께 경험한다. 정부는 치매가 단순히 개개인이 부담할 어려움이 아니라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전이 필요하다는 정책방향 아래 치매국가책임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치매국가책임제도는 크게 개인의 비용부담 절감대책과 치매 관련 인프라 확충대책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개인비용부담경감의 경우, 산정특례 대상적용을 통한 본인부담률 인하,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이 제시되었다. 인프라 확충으로는 치매안심센터 확대 설치, 치매안심병원 설립과 돌봄 보호시설 등 시설 확충과 관련 인력 확충이 제시되었다.

치매는 여타 일반적인 질환과는 달리 의료와 복지의 연계가 중요한 질환이기에 정책도 의료 서비스와 돌봄서비스가 적절히 융합·제공될 수 있도록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이번 호는 「치매국가책임제도 도입과 패러다임의 변화」를 정책현안 주제로 선정하였다. 대한치매학회 이재홍이사장은 '치매국가책임제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을 통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책방향에 대해서 치매전문의료인의 입장에서 정책방안별로 제언을 해주었다.

또한 치매의 의료와 복지의 융합적 측면은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서동민교수가 ‘치매국가책임제의 성공적 도입과 시행을 위한 제언’을 통해 의료와 복지의 연계부분을 논해주었다. 마지막으로 중앙치매센터 연구개발팀의 김빈나연구원이 ‘선진 국가들의 치매관리정책에 기반한 국내 치매관리정책 고도화를 위한 착안점’을 통해 해외에서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치매관련 정책의 소개와 국내 적용방안 등에 대해 소개해주었다.

치매국가책임제 설계와 운영에 큰 시사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

